

‘호남권 메가시티’ 첫발…수도권 일극체제 대항마 기대

인구 320만명 ‘거대 경제공동체’ 출범…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될 것
AI·재생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아우르는 산업 시너지로 자생력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호남권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구 320만명의 거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번 합의는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산업·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강력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수년간 담보 상태였던 행정통합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우선순위에 둘러싸운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교통망 연결, 미래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갖는 역사·정치적 의미는 남다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나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 각종 협약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따로 가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양 시도의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호남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자립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중앙 예산 따내기 경쟁에 매몰됐던 소

모적 관계를 청산하고, 320만 시도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선 경제적, 산업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광주시가 보유한 인공지능(A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역량과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전남도의 방대한 산업 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수도권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호남권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전남도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 중심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에너지밸리 확장과 광주-영암을 잇는 아우토반 건설 등이 가시화되면 인적, 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생활권 통합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리적인 통합 논의에만 치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행정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단일화, 지역화폐 통합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병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 지역 투자기관 노조원들이 보고회장 입구에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대통령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안착”

청와대 간담회 “재정지원·권한 이양 등 호남 발전 확실한 전기 마련”

박지원 의원, 광주일보 보도 거론하며 “속도감 있게 통합 추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의 최대 관건이었던 추진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쪽으로 기탁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와 ‘내륙 관통 KTX’ 등 구체적인 발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구상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통합 방식에 대한 ‘교통 정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 절차 간

소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일보 1월 3일 자 1면 톱기사와 3면 기사를 보면 주민투표 없이 광역의회 의결만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란 대신 시·도 의회 의결로 속도감 있게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편다. 주 의원은 “통합이 후유증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는 같은 도장을 있을 수 있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 의회의 동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가 가진 장점도 분명하지만 현재의 타임 스케줄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박 의원의 제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되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자주 열어 비단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구상을 보고했다. 신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의 법정부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조계원(여수 을)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한반도 K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이 견의한 앙도소득세 전액 및 법인세 절반 이상 요구에 대해 “재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환답하며, 오는 15일 국무총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상향과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전략과 함께,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요청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반도체 산업의 축을 남부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 우려되는 지역 갈등 현상과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특정 거점 도시로의 빨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예산과 주요 기관을毅然 무게로 배정하는 ‘균형발전 퀴어제’ 도입을 시사했다. 통합의 시너지가 나주, 목포, 순천 등 전남 전역으로 고루 퍼지게 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이 확인된 만큼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이 항구적인 법적 정지인 특별법 제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통합 명칭 서울 준하는 ‘특별시’로 확정

통합정부 위상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위 획득위해 공동협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6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고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을 ‘특별시’로 확정했다. 이는 통합 정부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풀어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을 공개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정부의 명칭과 지위 설정이다. 양 시도는 통합 광역지방정부를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명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이후의 청사 운영과 자치단체 체제에 대한 밀그림도 제시됐다. 현재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은 통합 정부의 청사로 그대로 존치해 활용하기로 했

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행정 기초자치단체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물리적 통합에 따른 지역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담겼다. 양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통합이 최대 관건이었던 추진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쪽으로 기탁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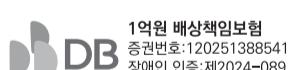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와 ‘내륙 관통 KTX’ 등 구체적인 발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320만 시·도민의 염원을 들어 대통합의 새 역사를 담당히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21세기에 딱 맞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

국내 유일 렌탈사 등록
전자교탁, 전자칠판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정부기관, 군부대(교실, 강의실, 회의실)
-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강당, 강의실, 회의실)
- 대기업, 삼성, 엘지 등(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업의 강점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 대기업
-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저속적인 수익 창출
-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 한 장기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 지역 기반 충분 운영으로 경쟁 부담 최소화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 창업을 고민 중인 이 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원하는 분
-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사업을 찾는 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 종교, 중심의 렌탈 및 조달시장은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며 지금 참여하시는 분께 지역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엠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밤 과총우(650305-1XXXXXX)
- 최후주소: 나주시 봉황면 철아길 28-46
- 피상속인 밤 과총우의 상속증명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법 2025-2단4870호로 신청하여 2026년 1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광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제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2일

- 상속인: 1. 과재우(840305-1XXXXXX)
광주 북구 유림로 175, 105동 2001호
(동립동, 삼아아파트)
- 2. 과유리(860621-2XXXXXX)
광주 남구 회체로 211, 106동 803호
(지석동, 한일빌딩3동)
- 신고기간: 2026. 1. 12. ~ 2026. 3. 22.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과재우의 주소

2026년 1월 12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 본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광고 게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 주식회사 명성가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30(하남동)
청산인 오기상

2026년 1월 12일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

광주일보</